

제9권 제1호

# 장애인복지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 목 차

1.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제안 .....	1
김정희 · 유경민 · 송기호 · 김용현	
2. 2017년 재가장애인 학대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	25
이동석	
3.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53
강승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9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9, No. 1, 1-24.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제언<sup>\*</sup>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김 정 희<sup>\*\*</sup>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장 유 경 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송 기 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임 김 용 현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심층인터뷰와 기관방문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 하고 유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업을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권리로 작용하고 비장애인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산되어,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장애인문화예술, 비영리 민간단체, 문화권, 문화예술실태조사, 문화예술참여 활성화

\* 본 연구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7년에 수행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 현황 실태조사' 연구를 일부 요약정리 한 것임

\*\* 주저자

## I. 서 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문화는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시청각을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공연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비례하여 문화에 대한 향유 역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의 확보가 문화예술 참여의 전제가 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운영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적극적 복지정책의 시행과 맞물려 장애인들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정체성 확보와 자아성취 달성욕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은 여전히 문화예술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운영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상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권리의 보장과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예술관련 유·무형 인프라를 파악하여 관련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심층인터뷰와 기관방문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와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창작활동 등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 1) 연구방법

####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정부 및 지자체(경기도에 한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현황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와 관련된 선행자료 및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국외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 (2)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방안 활성화를 위한 심층면접 및 기관방문

경기도 내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주요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문화예술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참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과 물리적 공간과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살펴보았다.

## II.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정책현황

### 1.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정책현황

#### 1) 권리로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예술관람이 27.5% 수준에 그치며, 문화시설이용이 54.6%,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29.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병태, 2007). 문화예술활동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영역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양현미, 2010).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사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인권현장 등 제도적 배경과 더불어 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증가, 다양한 장애인 예술제의 활성화, 장애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병태, 2015).

특히, 문화·예술 영역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재활을 통해 전문적 직업군으로 양성되기 좋은 영역으로 장애인이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나게 해 줌으로써(전병태, 2007),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참여함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되는(오혜경, 2005) 긍정적 측면이 있다. 즉,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및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정병은, 2016).

#### 2) 제도 및 정책현황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크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으로 크게 분류되며, 직접적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지원사업과 장애인문화예술 축제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혜택을 받는 문화누리카드가 중앙부처 주관의 장애예술인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문



화예술활동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예술활동을 진흥하고 있으나, 총괄 법령과 계획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

법안명	해당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input type="checkbox"/>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8.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input type="checkbox"/>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	<input type="checkbox"/>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input type="checkbox"/>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초 기준으로 지자체의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17개중 5개 단체, 기초자치단체 229개 가운데 4개 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하였다(한국장애예술인협회 내부자료, 2017). 현 상황에서 조례제정과 장애예술활동 지원 규모는 상관관계를 따져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1월 5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장애예술지원사업이 존재했으며, 조례가 있더라도 그 시행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치단체도 존재한다.

### 3) 경기도 제도 현황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각기 제정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경기도내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5년 229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99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기본이 되는 시행계획 수립은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현재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조례의 의무조항인 만큼 제일 시급한 사항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 예술인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례의 5조(사업)<sup>1)</sup>와 관련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유를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저

1)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적 성취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조례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는 실행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의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5년 3,897백만원의 예산, 향후 5년간 20,32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현장으로의 접근방안 마련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세부항목에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이 추가될 경우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년 현재 경기도의 도비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으로 이원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장애예술 향유나 문화예술인력교류, 공연예술단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주관하고 있고, 경기복지재단에 위탁된 누림센터를 통한 사업, 재활관련 문화프로그램, 문화복지 성격의 프로그램 등은 보건복지국 등이 주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분류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 2. 국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정책현황

### 1) 미국

미국은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 제504조’, ‘장애인 교육법’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일찍부터 장애인을 위한 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장애인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 증진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의 통합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백령 외, 2005).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적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정책은 ‘교육부 연방재활서비스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 보조금제도이며, 장애청년예술정책 중 주목할 부분으로 다양한 인턴십과 멘토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예술교육이 독립적인 것이 아닌 학교 교육, 장애인교육,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활동과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참여를 위해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치료와 교육은 각 주·시별의 지자체가 주도하며 일정한 지역의 미술관이 아닌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NCLB 정책과 같은 주정부의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김정애, 2013).

미국의 문화예술인력 양성 정책은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보다 참가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용이하도록 구성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주도보다 비영리 기관의 주도로 컨퍼런스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단체 및 비영리조직의 사업을 통해 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이후 문화 다원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연방예술기금은 특정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예술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건설, 교육, 훈련 등 제반적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방예술기금은 수준 높은 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 다양하고 훌륭한 예술에 대한 공공의 향유, 예술 기여에 대한 공공의 지식과 이해증진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지원)에 있어 단기적인 효율성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정책의 영향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한승준, 2017).

## 2) 영국

영국은 장애인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법령 제정과 함께 문화 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수의 지원제도(복권기금사업) 등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예술 위원회(Art Council England)”는 장애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하고, 예술단체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김정애, 2013). 영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은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과 같은 정부가 집중하는 현행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문화예술의 의존도가 급증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응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산업으로써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전문인력의 범위를 패션, 미디어 등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창작예술인과 제도권 간의 총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전문인력 및 기관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대영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Great Britain)는 영국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는 역할을 강조해왔다. 1997년 영연방정부의 문화부처인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창조성을 진흥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존에서 창의로 변화하였다. 문화정책의 초점이 창의 진흥으로 바뀜에 따라 문화매체체육부, 예술위원회, 예술단체 간 관계가 재정립되었으며, 예술위원회는 정부의 간섭, 예술계의 압박 등 이중적인 압력을 견지하면서 국가 문화와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압력이 존재하며, 최근 공공 부분과 사적 부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국 예술위원회는 투자의 적정 수준을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위원회 소속 어느 기관에서나 단일 대화를 통해 지속적, 반복적, 역동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학습함으로써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영국 예술위원회는 미션인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 비전인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문화적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승준·박치성·명성준·백두산·김은경, 2017).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수월성과 향유/수단적 목표로 탄력성과 지속가능성/다양성과 전문성이 포함된다. 특히,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는 장애예술(Disability Arts)을 장애인의 문화와 개성, 장애의 정치적 체험, 장애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예술 내부에서 생산된 작업 등을 반영하는 장애인에 의해서 생산된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 또한 장애인 예술 참여를 지원해주는 과정을 예술과 장애(Art and Disability)라고 하고 있다.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 받은 건축물은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예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3) 일본

1970년대부터 전개된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시설 ‘민들레의 집<sup>2)</sup>’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 예술(Able

<sup>2)</sup>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예술 활동을 단순히 복지나 치료의 관점이 아닌, 그 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과 개성에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한 ‘에이블 아트 운동’ 그 운동을 처음 제창하고 현재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 ‘민들레의 집’은 부속기관 ‘아트센터 하나’가 운영됨.

Art)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문화 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들레의 집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예술을 위해 기업,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재능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소속장애인이 만든 미술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양말, 손수건, 장화, 티셔츠 등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으로 기업과 협업을 택하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15003587> 기사인용).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은 대부분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청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문화예술부문의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의뢰, 매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5년 12월 ‘장애인 플랜-Normalization 7개년 전략’이 결정되어 관련 19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장애인 대책 추진본부’의 장애인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하나로 지역에서 공연, 전시 등의 개최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문화 활동 등 자기 표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김정애, 2013).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국규모의 장애인 예술·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촉발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예술·문화제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 및 문화강좌 개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 실행 주체는 각 지역의 정부기관이며, 교육 뿐 아니라 창작된 작품의 전시회나 음악회 등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장애예술가의 창작 욕구를 장려하고, 이에 요구되는 환경적 인프라의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예술 면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장애예술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에게 정책지원이나 작품발표기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2014).

### Ⅲ. 심층면접 및 기관방문

#### 1. 자료 수집 및 분석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주요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심층면접과 기관 방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나열한 후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중심의견들을 취합하고, 범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참여자 현황

연번	참여자 현황	
1	○○장애인합창단	참여자1
2	○○○아트센터	참여자2
3	○○○○○문화예술원	참여자3
4	○○○○○예술단체총연합회	참여자4
5	○○○○○○○아트	참여자5
6	○○○○○스튜디오	참여자6
7	○○○장애인복지관	참여자7
8	○○○○○센터	참여자8

#### 2. 분석결과

분석결과, 참여자의 의견은 제도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인식개선, 안정된 판로 확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two-track 운영,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유관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6개로 범주화되었다. 주요 범주별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요 범주별 분석결과

연번	주요 범주
1	제도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전담부서 운영)
2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인식개선
3	안정된 판로 확보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Two-Track(이중접근, 양면전략) 운영
5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6	유관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 1) 제도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전담부서 운영)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과 현장의 요구에 반응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발족되었으나 아직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앙부처에서 중심을 잡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이건 중앙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합창한다고 뭐한다 하면 예산을 안줍니다. 왜냐면 엄연히 과가 다르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도 그럴 겁니다. 문화예술이 나온지가 얼마 안됐죠. 한 5-6년 됐죠? 보건복지부는 문화 생각 안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안하는데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면 정말 안먹히지요” (참여자 1)

참여자 중 일부는 중앙부처에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우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심지어 문화예술 담당과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찾아오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며 장애인복지과로 안내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문화예술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문화예술 담당과의 업무에 장애인 문화예술이 소관 업무임을 확실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중앙부처에 가면 문화예술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완전히 정책이 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뻗어나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담당하는데 문화예술과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실무자로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럼 기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경기도가 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문화관련 업무를 하라는 것이지요.” (참여자 1)

## 2)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인식개선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가 있다보니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고, 처우면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예술가가 아닌 장애인으로 접근하는데서 오는 괴리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저희 스튜디오 직원은 3명으로 3명은(매니저포함) 정규직이며, 2명은 스태프 형식으로 채용합니다. 창작스튜디오 사업이 확정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직원 대부분이 예술계통(시각, 회화, 서양화 등)이며, 사회복지 전공 직원의 경우 적응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장애예술인을 예술가로 보기보다 장애인으로 먼저 보고 접근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여자 6)

이외에도 개인전이나 연극을 하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막연히 장애예술인의 전시나 공연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과 물리적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기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홍보나 인식개선과 병행하여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예술활동을 하는 극단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진전이나 미술전이라고 하면은 그걸 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 울릴만한 공간이 없고, 울려도 관객들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고, 수준이 낮다는 편견 때문에 잘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까 저희도 아예 킥터제를 줘서 장애인분들의 전시나 연극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걸 제기했었는데, 역차별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참여자 3)

### 3) 안정된 판로 확보

장애인들 중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종일 집중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장애인작가가 비장애인작가와 견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실력있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의무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 혹은 전문직업인 배출이라고 한다면 창작 지원을 하고, 프로로 입문하는 경우에는 판로, 홍보, 전시공간 등을 지원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작품전시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장애인작가가 비장애인 작가와 견줄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판로형성을 위해 해외 아트페어나, 조형아트 등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대형 미술관 전시 등을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작가추천을 하고 있어요. 전에 장애인예술가 중 해외 교환작가로 간 경우가 있었는데 해외와 국내는 작업 패턴이 틀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 스튜디오 시스템에 무척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참여자 6)

또한 실력 있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의무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심층면접 참여자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 전시하고 공연장소를 제공하는 등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가 꼭 직장에 나가서 하는 게 일자리는 아니잖습니까. 내가 작업을 해서 내놓은 작품 자체가 아트페어 같은 걸 통해서 시장 형성이 되고 팔리고 그런 게 수익으로 잡혀서 경제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작품만 만들어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면 내가 국가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참여자 4)

####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Two-Track(이중접근, 양면전략) 운영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참여자나 기관방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참여자 모두 문화향유 차원에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교육과, 전문예술인으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전문예술교육을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관계설정과 배려 등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 혹은 다른 장애유형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작업을 할 때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 및 창작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의 성격뿐만 아니라 장애유

형을 배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생활교육과 전문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생활예술부문과 전문 예술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Two-track 간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쪽에서 교육프로그램(장애예술가 대상)에 대한 욕구가 크고요. ○○○○스튜디오 내에서 현재 입주 작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비장애인 강사가 장애예술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예술가의 성향이나 장점을 부각시켜 예술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맞춤형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참여자 6)

## 5)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예술활동을 하는 공간의 접근성과 적합한 보조기구의 제공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문화향유 차원에서도 공연장의 물리적 접근성은 문화활동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의 제공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한 기관들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이 좋았고, 창작 및 교육공간을 최대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었다.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창작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수준 높은 결과물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일 경우 더욱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확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스튜디오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낮이 미술대, 확대안경 등 집에 비치가 불가능 한 것을 구비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참여자 6)

서울문화재단의 ‘○○○○스튜디오’의 경우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가 전용 창작레지던시로, 2007년 개관하여 서울시에서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장애예술가 12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전문가 매칭을 통해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 결과물들을 기획전시와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한 현재진행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을 위해 창작레지던스는 필수입니다. 전문예술인도 프로와 아마추어로 구분이 되는데, ○○○○스튜디오는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본 스튜디오에서 전문강사 및 큐레이터를 직접 섭외하고, 관련 인력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 등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문화협회, 미술협회는 콘텐츠 발굴이 부족했거든요. 현재 입주 작가 중 전문 예술작가는 신진 입주작가를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신진 입주작가(아마추어)를 전문 작가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참여자 6)

## 6) 유관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자들은 도차원에서 전시, 기획, 판로개척 등을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단체나 아트센터의 경우 교육, 행정,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판로는 더욱 개척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간혹 규모가 있는 후원사와 연결되어 그야말로 운이 좋게 전시회를 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작품활동과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향유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복지관과 문화예술 전문기관, 일회성 행사로 간신히 명맥을 잇는 군소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향유를 하는 복지관과 문화예술 전문기관(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현재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향유를 하다가도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문의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지만, 현재는 취미생활까지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장애예술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작가간의 아이디어나 정보교류 역시 중요합니다.”(참여자 6)

## IV.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방안

기관방문과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은 첫째, 전문예술인과 비 전문예술인 모두 대상이 되는 문화복지 수혜 관점에서의 장애예술정책, 둘째, 예술을 주 직업으로 하는 전문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셋째, 장애예술단체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세 개의 측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각을 분리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의 예술향유를 위한 정책방향

현재 장애인의 예술향유 증진 정책은 문화복지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교차되는 영역으로 크게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거나,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복지는 비전문 장애예술인과 전문장애예술인의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정책은 장애인의 문화 양극화 해소,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창작공간이 부족하거나 지원인력이 부족함에도 외부기관과의 연계나 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유관단체를 포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가 요청된다.

### 2. 전문 장애예술인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전문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과 비교하여 예술적 성취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통상의 직업예술인을 의미한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이 예술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술활동의 시작과 공개발표, 수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까지 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전문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 참여 후, 공개발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직업예술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수입발생은 전문 예술인에게도 여의치 않은 것이 예술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예술인에

게는 특히 수입발생을 위한 직업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지원정책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과 비전문 예술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예술인복지법의 법적예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전문 장애예술인으로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3. 경기도 장애예술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장애예술단체는 그 성격이 장애인의 예술향유, 회원 장애예술인의 직업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직업군 발굴보다는 취미활동과 일회성 행사위주의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창작공간의 미비, 전문예술가의 지속적인 지도의 어려움(비용발생), 창작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공간마련과 같은 물리적 환경 조성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함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 또한 소득을 얻는 주요 활동분야는 음악, 공예, 미술 등으로 그 영역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향후 경기도 장애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의 정책이 문화향유 차원과 전문예술인 육성 차원을 기본으로 하되, 단체의 구성원과 성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국내 언론보도 및 장애예술 주관기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된 장애예술활동 성과는 예술적 성취를 나열하거나 대중적 흥행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장애예술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직업예술활동으로서의 선순환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장애예술계에서는 예술활동이 수입(직업)으로 연결되도록 선순환 구조의 지원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관련법의 제·개정이 요청되었고, 세부사업별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몇몇 연구들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확대방향과 세부 사업별로 발전 방안 등을 다루었으나 공통적으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발전방향 제안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점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은 인턴십/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예술가들이 청년층이었을 때부터 예술문화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복지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참여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지적장애인예술가들을 오랜시간 비장애인예술가들이 조력자로 함께 하면서 이들의 예술성을 발굴해내는 ‘민들레의 집’과 같은 실천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예술적 특수성을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작업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마련과 역량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 및 투자 역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 예술과 장애 전략(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을 통해, 장애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에의 접근과 참여와 장애인 신진 전문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예술가와 장애 예술단체의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잠재관객을 개발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예술가들이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에서 생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중요하나, 각각의 고유성과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라는 타이틀로 또 다른 문화예술 정책이 실현되기 보다는 “장애”를 뛰어넘어 장애예술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인정하고, 통합된 문화예술 정책의 실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도 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기회를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 문화권이라고 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향유 차원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취미 수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직업군에 편입할 수 있는 재능이 탁월한 경우라면 전문적인 지원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결과에도 언급했듯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생활예술과 전문예술 두 차원으로 구분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정책을 전개할 때 이 두 차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기관의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차별화에 관한 것으로, 1회성 사업 혹은 행사위주의 기관에 대한 지원과 연속성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방문 결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법 짜임새 있게 소신을 갖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교육하며, 다양한 국제교류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기관들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물리적 공간이 협소해서 수고한 작품들이 제대로 보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설전시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주변을 오가는 혹은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되고 판매도 기대해 볼직하다. 셋째, 단계적인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수립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내 많은 단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통합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통해 경기도 내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크고 작은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하고, 유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업을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능 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권리로 작용하고, 비장애인의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산되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 경기도 문화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김정애(201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민 · 김원영(2015). 시 ·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 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99-128.
- 백령 · 권영욱 · 김태황 · 박숙경 · 윤상용 · 박만식 · 박성준 · 장은석(2005).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변경희 · 공마리아 · 정병은(201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
- 서우석 · 김정은(2010).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문화경제연구, 13(2), 3-26.
- 양지연 · 김혜인 · 민지은 · 서지혜 · 손차혜 · 이슬기 · 임영숙 · 조수아(2015).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패러다임 전환 방향 모색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예술영영학회.
- 양현미 · 김세훈 · 최보연(2010).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혜경(2005).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 87-120.
- 윤덕경(2011).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실재와 그 가능성. 한국무용연구, 29(3).
-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2014). 장애청년예술정책-욕망과 표현을 위한 실천과 정책론.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 정병은(2016). 장애아동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81-311.
- 전병태(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2010). 장애인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연백 · 이석원 · 이재완(2014).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율에 관한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91-11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한승준 · 박치성 · 명성준 · 백두산 · 김은경(2017).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국문화예술 위원회 · 한국정책학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2017). 소외계층 문화예술 정책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홍예리 · 김세훈(2016).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 -자기관리역량 관 점을 중심으로-. 한국청각 · 언어장애교육연구, 17(2), 143-164.

Cultural Ministers Council(2009), 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

## **A Study on Cultural-Art policy sugges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Gyeonggi-do**

**Kim Jung He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KODDI) Head of office for Policy Research

**Yoo Kyung Min**

KODDI office for Policy Research Research Planning Team Chief

**Song Ki Ho**

KODDI office for Policy Research Researcher

**Kim Yong Hyun**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manager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in order to access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and visits to institutions in Gyeonggi-do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data related to culture and ar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ultural visi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in business contents and status of the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elicit the attention and cooperation of the relevant groups, and ultimately become a professional artist and a source of cultural ar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search, Gyeonggi-do's culture and art community has become a universal right to be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as a result, improvement in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art by non-disabled people is widespread.

■ **key words** : The culture and art of the disabled, Non-profit organizations, Culture right,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Cultural Art, Promoting the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Art

## 24 장애인복지연구

논문투고일 : 2018. 4. 30.

논문심사일 : 2018. 6. 21.

게재확정일 : 2018. 6 .30.

장애인복지 연구 제9권 제1호

Disability &amp; Social Welfare

Vol. 9, No. 1, 25-51.

## 2017년 재가장애인 학대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 동 석

### 【국문초록】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학대실태를 전체적으로, 또한 학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17년도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재가장애인 1,165명을 진행된 학대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학대유형별 재가장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재가장애인 학대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적 학대가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58명으로 많았다. 또한 여성 및 지적장애인의 학대피해가 많았으며, 학대가해자는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주 등 매우 다양했다.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도움 필요 정도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43.8%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응을 한 경우도 64.2%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찰서, 주민 센터, 인권기관 등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5.7%에 불과하였다. 결국 학대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반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학대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으며, 피상적 수준이나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이 가능했다.

**주제어:**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실태, 장애인학대 유형

\* 이 논문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재가 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결과(이동석·이유림, 2017)”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I. 서 론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엄전노예’에 이어 2016년에도 ‘축사 노예’, ‘타이어 노예’, ‘식당 노예’ 등 새로운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8년 봄에도 잠실야구장에서 15년 동안이나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무급으로 청소를 하던 지적장애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 노예<sup>1)</sup>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장애인은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상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동석 외, 2014). 장애인은 그저 시혜의 대상이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권만 보장하면 된다는 국민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학대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학대실태를 전체적으로, 또한 학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없다. 다만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관련 조사연구에서 학대 실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대실태를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3년마다 실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학대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는 가족 내에서의 차별 및 폭력, 성 학대와 관련된 실태만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뿐만 아니라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와 괴롭힘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보니 괴롭힘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실태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성적 학대 실태는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성폭력 피

1) 노예란 ‘어떠한 사람이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을 통해 강제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자유의사의 박탈을 수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Bales and Robbins, 2001). 따라서 노예제는 타자의 통제, 노동력의 착취, 그리고 위협 또는 폭력의 사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이동석 외, 2015). 그런데 올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모두 철저한 감시 및 통제 하에 놓여있었으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 스스로를 가해하도록 지시받는 등 일상적인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결국 장애인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를 해석하면 현대판 노예제로 볼 수 있다.

해자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중 여성장애인 성적 학대실태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 역시 학대실태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성적 학대만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실태보고서에서는 특별히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신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인권상담을 분석하여 학대 실태를 유추한 연구(이동석, 2017)가 있지만, 상담전화에 기반한 실태 일 뿐 실태조사가 아닌 한계가 있다. 또한 2016년도에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영주시 재가장애인의 학대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동석 · 전지영 · 이유림, 2016)가 있지만 경상북도 영주시로 지역을 한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표본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학대실태를 조사한 연구(조한진 외, 2012)가 존재하지만,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재가장애인 학대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재가장애인 대상 학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재가장애인 학대 실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도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이뤄져왔을 뿐이다. 하지만,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 정도 등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가장애인 학대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경북, 전남, 경기 지역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6년에 처음으로 경북 영주시에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당수의 학대 피해자를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에 진행된 재가장애인 학대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학대유형별 재가장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재가장애인 학대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학대의 개념 및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학대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의 유형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우선 행태에 따라 나누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방임·유기, 차별적 학대, 제도적 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가정에서의 학대, 시설에서의 학대, 지역사회에서의 학대로 나눌 수 있다(이동석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를 참고하여 행태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방임·유기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학대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 신체적 체벌, 부적절한 건강관리<sup>2)</sup>, 약물의 오남용, 감금을 포함한다. 이 중 신체적 체벌은 아직도 많은 경우 교육을 이유로 허용된다는 인식이 많고 부적절한 건강관리의 경우 학대의 개념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개념이다.

### 2.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의 상대방이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써 접촉학대(contact abuse)와 비접촉학대(non-contact abuse)로 나눌 수 있다. 접촉학대는 강간, 성교, 자위행위, 성적 접촉을 포함하며, 비접촉학대는 성희롱, 성기노출, 포르노를 포함한다.

<sup>2)</sup> 부적절한 건강관리에는 당뇨병 장애인임에도 설탕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거나, 관절염이 있는 장애인에게 건강을 이유로 무리한 운동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반면 방임·유기에서 건강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가 걸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성적 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동의’인데 법률에 의하여 동의를 유보된 경우에서의 동의,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서의 동의, 자유로운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동의가 특히 문제된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13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동을 한 사람은 13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법률에 의하여 동의를 유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동의, 예를 들어 성적 행위를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한 동의, 성적 행위의 결과 또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동의도 유효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의도 유효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적 학대가 동의가 유보된 사람,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의는 성적 학대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

### 3.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종종 감정적 학대(emotional abuse)로 다루어진다. 협박, 통제, 비난, 괴롭힘, 언어적 학대(verbal abuse,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것), 냉대, 고립이 이에 포함된다(DH, 2000; Gaylard, 2008).

### 4. 재정적 · 물질적 학대

절도, 사기, 유언장 변조 또는 위조 등이 이에 포함되며(DH,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약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장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5. 방임 · 유기

앞서 살펴본 유형은 모두 작위에 의한 학대 유형인 반면 방임 · 유기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방임 · 유기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으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체, 사회, 건강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포함된다. 불충분한 영양공급, 부적절한 난방 시스템, 의약품의 부족, 의료보장 · 사회보장 · 교육 서비스의 결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DH, 2000).

### Ⅲ.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경기, 경북, 전남 지역 재가장애인 1,1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주소불명, 이사, 사망, 장기부재, 조사거부 등의 사유로 110명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중 경기도가 476명으로 전체 1,055명 중 4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37.4%, 경상북도가 17.4%를 차지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역별 차이는 비교분석하지 않았다.

〈표 1〉 지역별 조사·분석 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전라남도	395	37.4
경상북도	184	17.4
경기도	476	45.1
합계	1,055	100.0

#### 2. 조사방법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였으며, 사전 연구결과를 통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조사단은 2인 1조로 구성되었으며, 사전교육을 받고 조사에 투입되었다. 재가장애인들에게 사전 전화연락을 통해 동의를 받은 후에만 개별방문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대상 장애인은 지역의 모든 장애인으로 하지 않고,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장애영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대상 장애인을 편의적으로 선별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연령, 장애, 수급여부, 가족사항 등과 같은 일반사항,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 및 유기·방임 등의 학대경험여부 및 구체적 내용, 조사원의 관찰기록과 같은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었다.

## IV. 조사 결과

### 1. 응답자 일반특성

#### 1) 응답자 연령 현황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21.2%(22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50대 17.2%(181건), 30대 15.9%(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전국적인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응답자 연령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장애인등록현황 (2015년 12월 기준)
10대	27	2.6	3.6
20대	96	9.1	3.6
30대	168	15.9	6.3
40대	162	15.4	12.5
50대	181	17.2	21.0
60대	224	21.2	20.6
70대	114	10.8	31.4
80세 이상	62	5.9	
무응답	21	2.0	—
합계	1,055	100.0	100.0

#### 2) 응답자 성별 현황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49.6%(523건)로 남성 48.3%(510건)보다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 응답자 성별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남성	510	48.3
여성	523	49.6
무응답	22	2.1
합계	1055	100.0

### 3) 응답자 장애유형 현황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4.7%(57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15.9%(168건), 뇌병변장애 10.8%(114건), 정신장애와 자폐성장애가 각각 6.4%(68건), 4.1%(43건)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확률표집방식의 조사가 아니고,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장애영역을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등록현황비율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표 4〉 응답자 장애유형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지체장애	168	15.9
뇌병변장애	114	10.8
시각장애	36	3.4
청각장애	19	1.8
언어장애	6	0.6
신장장애	4	0.4
심장장애	2	0.2
뇌전증장애	5	0.5
지적장애	577	54.7
자폐성장애	43	4.1
정신장애	68	6.4
미등록장애	6	0.6
무응답	7	0.7
합계	1,055	100.0

#### 4) 응답자 장애등급 현황

응답자 장애등급의 경우 2급이 34.0%(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3급 29.0%(306건), 1급 28.7%(303건), 4급 2.7%(28건) 순으로 많았다. 이 또한 등록장애인 장애등급비율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중증장애(1-3급)영역을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하였기 때문이다.

〈표 5〉 응답자 장애등급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1급	303	28.7
2급	359	34.0
3급	306	29.0
4급	28	2.7
5급	20	1.9
6급	11	1.0
미등록 장애	9	0.9
무응답	19	1.8
합계	1,055	100.0

#### 5) 응답자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28.0%(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교 졸업 16.0%(169건), 무학 14.0%(148건), 중학교 10.9%(115건) 순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6〉 응답자 교육수준

구분	빈도(건)	비율(%)
무학	148	14.0
초등학교	169	16.0
중학교	115	10.9
고등학교	295	28.0
전문대학	37	3.5
대학교이상	38	3.6
무응답	253	24.0
합계	1,055	100.0

## 6) 응답자 경제활동 상태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의사가 전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4.2%(5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15.6%(165건), 실업자가 9.7%(102건)로 많았다. 이처럼 응답자 중 64% 정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21.2%에 불과했으며, 이 중 임금근로자가 15.6%(165건), 무급가족종사자가 2.9%(31건),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2.7%(28건)이었다.

〈표 7〉 응답자 경제활동 상태

구분	빈도(건)	비율(%)
임금근로자	165	15.6
고용주, 자영업자	28	2.7
무급가족종사자	31	2.9
실업자	102	9.7
비경제활동인구	572	54.2
무응답	155	14.7
합계	1,055	100.0

## 7) 응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수급자가 50.3%(531건)으로 비수급자 42.7%(452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매년 3%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응답 장애인의 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학대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를 조사하다보니 수급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표 8〉 응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구분	빈도(건)	비율(%)
수급자	531	50.3
비수급자	452	42.9
무응답	72	6.8
합계	1,055	100.0

## 8) 응답자 거주 주택유형

응답자의 거주형태의 경우 일반아파트 및 주택이 89.3%(9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병원이 3.0%(32건) 이었다. 하지만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인 경우가 27건,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인 경우도 9건이나 되었다. 결국 거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3.5%로 나타났고, 또한 일반 아파트나 주택 중에서도 열악한 거주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 장애인들의 거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표 9〉 응답자 거주 주택유형

구분	빈도(건)	비율(%)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병원	32	3.0
일반아파트 및 주택	943	89.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7	2.6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9	0.9
무응답	44	4.2
합계	1,055	100.0

## 9) 응답자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48.3%(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4%(289건)로 높았다.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61.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0〉 응답자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빈도(건)	비율(%)
매우 나쁘다	59	5.6
나쁜 편이다	289	27.4
좋은 편이다	510	48.3
매우 좋다	135	12.8
무응답	62	5.9
합계	1,055	100.0

## 10) 응답자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응답자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304건)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응답이 26.3%(277건)으로 다음으로 많았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7%(208건) 순이었다.

〈표 11〉 응답자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구분	빈도(건)	비율(%)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08	19.7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277	26.3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304	28.8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19	11.3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97	9.2
무응답	50	4.7
합계	1,055	100.0

## 2. 학대유형별 비교

학대유형별로 학대 건수 또는 학대 사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의 경험 이 있는 응답자는 144명이지만 정서적 학대 사례는 299건이었다. 또한 경제적 학대 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명이지만 경제적 학대 사례는 90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유기방임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명이지만 유기·방임의 학대 사례는 39건이었 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응답자는 58명이고 학대사례는 120건, 성적 학대의 경우 응 답자는 32명이고 학대사례는 51건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총 599건의 학대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령별, 성별, 장애종류별 등에 따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모든 학대사례가 필요한 응답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분석에 활용된 총 건수는 599건이 아니고, 또한 동일 학대 유형이라 할지라도 실태 범주별로 합계 수는 다를 수 있다.



## 1) 학대유형별 학대빈도 현황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월 1~3회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경우와 더 느리게 발생하는 경우가 비슷했다. 즉 발생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경제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월 1~3회에서 연 1~2회 정도로 발생빈도가 그나마 작았다. 방임·유기는 거의 매일이나 주 1~2회처럼 자주 일어나는 경우와 연 1~2회 발생하는 경우로 이분화되어 있었다.

〈표 12〉 학대유형별 학대빈도 현황

구분		거의매일	주 3~5회	주 1~2회	월 1~3회	연 3~6회	연 1~2회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24	50	46	73	40	51	284
	비율(%)	8.4	17.6	16.1	25.7	14.0	17.9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8	10	6	21	16	16	77
	비율(%)	10.3	12.9	7.7	27.2	20.7	20.7	100
방임·유기	빈도(건)	6	3	5	2	3	14	33
	비율(%)	18.1	9.0	15.1	6.0	9.0	42.4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12	13	13	32	21	19	110
	비율(%)	10.9	11.8	11.8	29.0	19.0	17.2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	3	1	9	12	21	47
	비율(%)	2.1	6.3	2.1	19.1	25.5	44.6	100

## 2) 학대유형별 학대가해자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부모와 친구·이웃이 주요 학대가해자였고, 경제적 학대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와 더불어 친구·이웃이 주요 학대가해자였다. 또한 방임·유기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처럼 가족이 주요 학대가해자였고, 성적 학대는 친구·이웃이나 친인척이 주요 학대가해자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대는 가족 내, 또는 가까운 주변 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표 13〉 학대유형별 학대가해자

구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그 외의 친인척	친구 이웃	공공 기관 종사자	이용 시설 종사자	거주 시설 종사자	사회 서비스 종사자	병원 종사 자	직장 동료 등	기타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 (건)	75	16	26	11	6	99	4	5	0	9	1	17	17	286
	비율 (%)	26.2	5.5	9.0	3.8	2.0	34.6	1.3	1.7	0.0	3.1	0.3	5.9	5.9	100
경제적 학대	빈도 (건)	23	7	19	1	7	18	0	0	0	3	0	7	0	85
	비율 (%)	27.0	8.2	22.3	1.1	8.2	21.1	0.0	0.0	0.0	3.5	0.0	8.2	0.0	100
방임 · 유기	빈도 (건)	15	8	4	5	0	0	0	0	2	4	1	0	0	39
	비율 (%)	38.4	20.5	10.2	12.8	0.0	0.0	0.0	0.0	5.1	10.2	2.5	0.0	0.0	100
신체적 학대	빈도 (건)	37	15	6	1	0	25	12	15	0	1	0	6	0	118
	비율 (%)	31.3	12.7	5.0	0.8	0.0	21.1	10.1	12.7	0.0	0.8	0.0	5.0	0.0	100
성적 학대	빈도 (건)	0	4	0	2	10	25	0	0	1	0	0	0	0	42
	비율 (%)	0.0	9.5	0.0	4.7	23.8	59.5	0.0	0.0	2.3	0.0	0.0	0.0	0.0	100

### 3) 학대유형별 성별 현황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학대가 더 많았다.

〈표 14〉 학대유형별 성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161	133	294
	비율(%)	54.7	45.2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42	47	89
	비율(%)	47.1	52.8	100
방임·유기	빈도(건)	15	24	39
	비율(%)	38.4	61.6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95	76	171
	비율(%)	55.6	44.4	100
성적 학대	빈도(건)	7	38	46
	비율(%)	15.2	82.6	100

#### 4) 학대유형별 연령 현황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비교적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고 있었다. 경제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집중되어 있었으며, 방임·유기는 30대부터 50대까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 15〉 학대유형별 연령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름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31	70	51	39	53	21	14	4	0	283
	비율(%)	10.9	24.7	18.0	13.7	18.7	7.4	4.9	1.4	0.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4	14	13	17	20	11	4	2	0	85
	비율(%)	4.7	16.4	15.2	20.0	23.5	12.9	4.7	2.3	0.0	100
방임·유기	빈도(건)	2	2	9	7	7	5	5	1	0	38
	비율(%)	5.2	5.2	23.6	18.4	18.4	13.1	13.1	2.6	0.0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15	27	15	10	13	12	15	6	7	120
	비율(%)	12.5	22.5	12.5	8.3	10.8	10.0	12.5	5.0	5.8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	13	11	12	9	3	0	0	2	51
	비율(%)	1.9	25.4	21.5	23.5	17.6	5.8	0.0	0.0	3.9	100

#### 5) 학대유형별 장애유형

정서적 학대는 주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나머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주로 지적장애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에서 발생했다. 특히 성적 학대는 지적장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6〉 학대유형별 장애유형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미등록장애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24	11	0	0	1	0	4	0	1	0	41
	비율(%)	58.5	26.8	0.0	0.0	2.4	0.0	9.7	0.0	2.4	0.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24	26	0	3	1	1	28	3	3	1	90
	비율(%)	26.6	28.8	0.0	3.3	1.1	1.1	31.1	3.3	3.3	1.1	100
방임·유기	빈도(건)	12	5	0	3	0	0	15	0	4	0	39
	비율(%)	30.7	12.8	0.0	7.6	0.0	0.0	38.4	0.0	10.2	0.0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40	29	0	7	5	0	66	27	0	3	177
	비율(%)	22.5	16.3	0.0	3.9	2.8	0.0	37.2	15.2	0.0	1.6	100
성적 학대	빈도(건)	9	6	1	0	0	0	34	0	0	1	51
	비율(%)	17.6	11.7	1.9	0.0	0.0	0.0	66.6	0.0	0.0	1.9	100

## 6) 학대유형별 장애등급

정서적 학대는 주로 3급과 2급 장애인에게 집중되었다.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 학대는 3급에서 많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에서 많이 발생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1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마찬가지로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에서 많이 발생했다.

〈표 17〉 장애등급에 따른 학대 경험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장애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0	15	21	3	2	0	0	41
	비율(%)	0.0	36.5	51.2	7.3	4.8	0.0	0.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27	21	31	3	3	1	0	86
	비율(%)	31.3	24.4	36.0	3.4	3.4	1.1	0.0	100
방임·유기	빈도(건)	11	9	14	1	1	0	3	39
	비율(%)	28.2	23.0	35.8	2.5	2.5	0.0	7.6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60	32	41	12	14	8	10	177
	비율(%)	33.8	18.0	23.1	6.7	7.9	4.5	5.6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4	13	19	0	1	0	4	51
	비율(%)	27.4	25.4	37.2	0.0	1.9	0.0	7.8	100

## 7) 학대유형별 교육 수준 현황

정서적 학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학대와 성적학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지만,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경제적 학대의 경우 대학교 이상도 13.2% 정도를 차지했다. 방임·유기와 신체적 학대의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지만, 방임·유기의 경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많았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이 많았다.

〈표 18〉 학대유형별 교육수준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이상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4	13	11	8	0	5	41
	비율(%)	9.7	31.7	26.8	19.5	0.0	12.1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10	16	3	27	3	9	68
	비율(%)	14.7	23.5	4.4	39.7	4.4	13.2	100
방임·유기	빈도(건)	3	3	7	17	1	3	34
	비율(%)	8.8	8.8	20.5	50.0	2.9	8.8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9	24	20	44	13	5	115
	비율(%)	7.8	20.8	17.3	38.2	11.3	4.3	100
성적 학대	빈도(건)	9	7	4	19	3	2	44
	비율(%)	20.4	15.9	9.0	43.1	6.8	4.5	100

## 8) 학대유형별 경제활동 현황

모든 학대 유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및 고용주·자영업자도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9〉 학대유형별 경제활동 현황

구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5	7	0	10	19	41
	비율(%)	12.1	17.0	0.0	24.3	46.3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18	4	4	6	52	84
	비율(%)	21.4	4.7	4.7	7.1	61.9	100
방임·유기	빈도(건)	2	1	1	5	26	35
	비율(%)	5.7	2.8	2.8	14.2	74.2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12	2	5	22	74	115
	비율(%)	10.4	1.7	4.3	19.1	64.3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1	0	3	7	29	50
	비율(%)	22.0	0.0	6.0	14.0	58.0	100

### 9) 학대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전반적으로는 수급자의 비율과 비수급자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정서적 학대와 방임·유기의 경우 수급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 비수급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표 20〉 학대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25	16	41
	비율(%)	61.0	39.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38	52	90
	비율(%)	42.2	57.7	100
방임·유기	빈도(건)	26	13	39
	비율(%)	66.6	33.3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38	81	119
	비율(%)	31.9	68.1	100
성적 학대	빈도(건)	21	29	50
	비율(%)	42.0	58.0	100

### 10) 학대유형별 거주유형

모든 학대 유형에서 일반아파트 및 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89.3%가 일반 아파트 및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조금 더 유의해서 볼만한 사항은 경제적 학대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사는 비율이 높았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거주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표 21〉 학대유형별 거주유형

구분		장애인거주 시설, 요양시설, 병원	일반 아파트 및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고정적 거주지 없음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1	39	1	0	0	41
	비율(%)	2.43	95.1	2.4	0.0	0.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3	76	7	0	4	90
	비율(%)	3.3	84.4	7.7	0.0	4.4	100
방임·유기	빈도(건)	6	28	5	0	0	39
	비율(%)	15.3	71.7	12.8	0.0	0.0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21	102	18	0	0	141
	비율(%)	14.8	72.3	12.7	0.0	0.0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	49	0	1	0	51
	비율(%)	1.96	96.0	0.0	1.9	0.0	100

## 11) 학대유형별 건강 상태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신체적 학대의 경우 건강이 나쁜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적 학대의 경우 건강이 좋은 편이 훨씬 더 많았다.

〈표 22〉 건강상태에 따른 학대 경험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11	22	8	0	41
	비율(%)	26.8	53.6	19.5	0.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1	56	28	5	90
	비율(%)	1.1	62.2	31.1	5.5	100
방임·유기	빈도(건)	8	17	11	3	39
	비율(%)	20.5	43.5	28.2	7.6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4	64	35	17	120
	비율(%)	3.3	53.3	29.1	14.1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	15	22	13	51
	비율(%)	1.96	29.4	43.1	25.4	100

## 12) 학대유형별 도움필요정도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보다는 일부일지라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적 학대의 경우 남의 도움 없이 모두 또는 대부분의 일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편이 훨씬 더 많았다.

〈표 23〉 도움필요정도에 따른 학대 경험

구분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합계
정서적 학대	빈도(건)	10	8	17	6	0	41
	비율(%)	24.3	19.5	41.4	14.6	0.0	100
경제적 학대	빈도(건)	11	19	24	24	12	90
	비율(%)	12.2	21.1	26.6	26.6	13.3	100
방임·유기	빈도(건)	2	6	12	13	6	39
	비율(%)	5.1	15.3	30.7	33.3	15.3	100
신체적 학대	빈도(건)	14	25	37	31	13	120
	비율(%)	11.6	20.8	30.8	25.8	10.8	100
성적 학대	빈도(건)	18	15	10	6	2	51
	비율(%)	35.3	29.4	19.6	11.7	3.9	100

### 3. 학대에 대한 대응

#### 1) 학대 지속기간

130명이 학대에 대한 대응 여부와 방식을 응답해주었다. 먼저 학대가 지속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37.7%(49건)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년 미만”이 21.5%(28건), “10년 이상”이 18.5%(24건), “5년 이상~10년 미만”이 12.3%(16건), 마지막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10.0%(13건) 순이었다.

〈표 24〉 학대 지속기간

구분	빈도(건)	비율(%)
1년 미만	49	37.7
1년 이상 ~ 3년 미만	28	21.5
3년 이상 ~ 5년 미만	13	10.0
5년 이상 ~ 10년 미만	16	12.3
10년 이상	24	18.5
합계	130	100.0

#### 2) 학대에 대한 대응 여부

학대에 대해 대응을 한 경우는 55.4%(72건)였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43.8%(57건)이었다. 따라서 학대에 대해 대응을 한 경우가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5〉 학대에 대한 대응 여부

구분	빈도(건)	비율(%)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57	43.8
대응했다.	72	55.4
무응답	1	0.8
합계	130	100



## (1) 무대응 한 이유

무대응 했다고 응답한 43.8%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에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1.0%(49건)로 가장 많았다.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18.4%(29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서”라는 응답은 17.1%(2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12.7%(20건),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는 9.5%(15건), “보복이 두려워서”가 7.6%(12건)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든 현재의 인식이든 간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신고 방법 등 정보를 몰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20% 이상이었기 때문에 당사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무대응한 이유

구분	빈도(건)	비율(%)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서	27	17.1
보복이 두려워서	12	7.6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15	9.5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20	12.7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29	18.4
과거에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서	49	31.0
기타	6	3.8
합계	158	100.0

## (2) 대응을 한 경우 대응방식

대응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저항하였다.”는 응답이 33.9%(37건), “가족 혹은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30.3%(33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서, 주민 센터, 인권기관 등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5.7%

에 불과하였다. 결국 공적기관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공적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표 27〉 대응을 한 경우 대응방식

구분	빈도(건)	비율(%)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저항하였다	37	33.9
가족 혹은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33	30.3
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였다	19	17.4
학대·장애·인권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9	8.3
기타	11	10.1
합계	109	100.0

## V. 결론 및 제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없었다. 2016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영주시 재가장애인 367명을 대상으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분석대상 303명 중 최소 1개 유형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28명이었고, 중복을 허락하여 사례수로 보면 72건이었다(이동석 외, 2016). 이처럼 사례수가 적다보니 학대실태를 분석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1,165명을 조사하고, 1,05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를 경험한 경우 하나의 학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고 있었다.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4명이지만 정서적 학대 사례는 299건이었다. 또한 경제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명이지만 학대사례는 90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유기·방임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명이지만 학대사례는 39건이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응답자는 58명이고 학대사례는 120건, 성적 학대의 경우 응답자는 32명이고 학대사례는 51건이었다. 이에 따라 심층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장애인학대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적 학대가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58명으로 많았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들의 학대 피해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학대가 더 많았다. 가부장적 문화와 더불어 장애라는 취약성 때문에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여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와 학대에 대한 자기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대 가해자를 보면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매우 다양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부모와 친구·이웃이 주요 학대가해자였고, 경제적 학대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와 더불어 친구·이웃이 주요 학대가해자였다. 또한 방임·유기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처럼 가족이 주요 학대가해자였고, 성적 학대는 친구·이웃이나 친인척이 주요 학대가해자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대는 가족 내 또는 가까운 주변 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인권교육이나 학대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집단은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대방지 교육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의무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학대방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회 등을 통한 교육, 지역단위 소모임 교육, 전단지 등과 같은 홍보물에 의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했다. 정서적 학대만 주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주로 지적장애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에서 발생했다. 특히 성적 학대는 지적장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인권교육의 내용에 지적장애인 또는 조금 더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인권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자기방어훈련, 학대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제적 수준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수급자의 비율과 비수급자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로 비슷했지만, 전반적인 수급률이 3%인 점과 비교해보면 수급자일 경우 학대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일부 학대피해자의 경우 거주지도 열악했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사는 비율이 높았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거주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주거약자 층을 대상으로 자기옹호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건강상태가 나쁘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학대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타인의 도움을 자신의 통제권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대가 일단 발생하면 지속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대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43.8%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응을 한 경우도 64.2%는 스

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찰서, 주민센터, 인권기관 등 공적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5.7%에 불과하였다. 결국 학대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반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실태를 탐색적 또는 기술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제언은 피상적 수준에 머무른 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본적 실태에 바탕을 두고 학대의 원인 및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이동석. 2017.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7년 5월호. 24-38.
- 이동석 · 김주경 · 박수인 · 조문순 · 조주희 · 서보훈 · 허주현. 2014. 『장애와 학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동석 · 박수인 · 허주현 · 김기원 · 조문순 · 이미현 · 백지현. 2015.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려하지 않는 사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동석 · 이유림. 2017.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재가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 이동석 · 전지영 · 이유림. 2016. 『영주시 재가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 조한진 · 강민희 · 박옥순 · 염형국 · 임소연 · 정희경 · 허숙민. 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Bales, K. and Peter, T. Robbins, 2001.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a cri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slavery agreements and concepts of slavery”, Human Rights Review, 2(2), 18-45.
- DH. 2000. No Secrets: guidance 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ulti-agency policies and procedures to protect vulnerable adults from abuse. London: Department of Health.
- Gaylard, D. 2008. “Policy and practice”. In Mantell, A. and Scragg, T. (Eds.). Safeguarding adults in social work. Exeter: Learning Matters. 9-30.

## Results and Implication of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n Community

**Lee Dong Suk**

SungKongHoe Univ. Lecturer

### 【Abstract】

Disability abuse persistingly happens. However national wide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s not published yet. This paper analyzed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n Kyungki, North Kyungsang, and South Chulla province in 2017, and drew the implication for prevention of abuse and support for victims.

As a result of analysis, 144 disabled peoples suffer the emotional abuse. It is the most frequent abuse. and physical abuse and economical abuse victims are 58 separately. Disabled women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ccupied a lot of parts in abuse victims. A very various persons assaulted abuse such as spouse,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social workers, and employers.

Economic level, health condition, and support needs level seems to make an impact on disability abuse. 43.8% of abuse victims did not respond to abuse. 64.2% of respondents made an effort to solve the situation on his own. Only 25.7% of respondents made use of official help such as police, resident center, human rights institute, and so on. Consequently disability ability seems to continue. This survey provided the base on the policy development for abuse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victims according to clarify the actual state of disability abuse.

■ **key words** : Disability abuse, actual condition of disability abuse

논문투고일 : 2018. 05. 02.

논문심사일 : 2018. 06. 21.

게재확정일 : 2018. 06. 30.





장애인복지 연구 제9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9, No. 2, 53-74.

##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 승 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월에 J시 지역 4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16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령장애인들이 취업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정신건강이 감소하였고,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낮출 수 있는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고령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낮출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고령장애인, 정신건강, 취업, 차별경험

## I. 서 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의 전면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5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62.7%에서 2014년 74.0%로 급증하였으며,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도 2005년 32.6%에서 2014년 43.3%로 급증하였다(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5;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 2006). 장애인구의 고령화의 주된 이유는 일반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각종 노인성 질환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되는 노화관련 장애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 적절한 보장구의 개발, 공공의료 개선, 공공정책 증진 등으로 인한 생존율 증가와 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노인으로 되는 고령화된 장애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양희택, 김민수, 박익샘, 2013). 이러한 고령화된 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노승현, 2012)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령화도 맥락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연구의 목적과 정의에 따라 연구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법과 정책에 따른 기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서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만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5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50세 이상은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장애인들은 조기노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령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승현(2012)은 이러한 장애인의 조기노화 특성을 반영해서 장애인의 고령화는 보다 더 낮은 연령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령장애인 기준을 50세(양희택, 신원우, 2011), 55세(이영미, 2013)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이은실, 2018에서 재인용).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법과 정책적 기준과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조기노화라는 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조기노화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기준을 45세로 하였다.

한편 직업은 장애인에게 생계수단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구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직업활동이 정신건강 측면-행복감, 생활만족도, 사회적 고립감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의 낮은 사회참여활동과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강승원, 이해경, 2016; 최미영, 이승은, 박현식, 2015), 사회적 관계의 단절(김미옥, 최정민, 강승원, 2013), 경제활동의 미참여(고민석, 김동주, 2014; 김한성, 이유신, 2014; 심경순, 2013)가 행복감이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업은 우울을 낮춘다는 결과(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장재윤 외, 2004)를 통해서 볼 때, 장애인에게 취업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보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50세 이상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 정도이며,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은 노화로 인해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직업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복지 환경이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사회참여 등 생활전반 영역에서 차별적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72.6%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보고하였다(김성희 외, 2015).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민석, 김동주, 2013;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2015; 김종일, 2013; 송진영, 2013; 이중섭, 2009; 이지수, 2011; 정승원, 2012).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차별경험이 우울이나 고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상남, 신학진, 2011; 전지혜, 2010). 즉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고령화 되고 있는 장애인들도 유사한 경험을 해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고령화에 따른 이중적 차별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별경험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장애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차별경험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실태와 현황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찬우, 2015; 양희택, 신원

우, 2011)가 주를 이루고, 최근에는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삶의 질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강승원, 이해경, 2016; 권오균, 2008; 김성원, 2015; 김수봉, 고재욱, 2011), 고령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김성진, 2012; 노승현, 2012; 이채식·김명식, 2014; 최운정, 박경수, 이석호, 2014)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가장애노인의 상실감과 자살생각(박현숙, 박용순, 2015), 우울과 장애노인의 삶의 질 연구(김형수, 김용섭, 2009)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인 취업과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령장애인의 취업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고령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

고령장애인이란 장애와 함께 노화에 따른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되는 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정도 일찍 조기노화가 진행된다고(김용탁, 2007; 노승현, 2012). 이에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 50세 이상, 55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기도 하였으며, 장애기간에 따라 40세 이상의 장애인도 노화와 관련된 연구에 포함하기도 하고 있다(김은주, 2012; 신유리 외,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45세 이상의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신건강(mental health)은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측정 기준과 개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다(전용수, 2007). 일반적으로 건강은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으로 구분하며, 정신건강은 건강한 정신의 향상(박병순, 2010)을 의미한다. 최영희(1999)는 정신건강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가지는 중요한 힘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역동적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조광호(2003)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개인 정신의 내적 균형, 정신적 구조의 외부환경에의 적합 및 사회적 기능을 함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의 정서상태, 그가 수립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문화적 관계를 포괄하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잘 견디어 내어 정서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며, 욕구부족과 갈등,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잘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높고,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김승경, 2010; 김유경, 2010). 한편 정신건강을 긍정적 정신건강과 부정적 정신건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Bryant와 Veroff(1983), Veit와 Ware(1983)에 의하면 긍정적 정신건강은 심리적 안녕상태를 의미하며, 긍정적 정서와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정신건강은 심리적 스트레스로서 불안, 우울행동, 정서적 통제 상실을 말한다(오찬교,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현실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불안, 우

울, 자살생각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정신건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가 발생된 이후 장애수용 과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년기에 발생한 뇌졸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친구·이웃 등 사회적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관계단절을 경험하게 된다(김미옥, 최정민, 강승원, 2013). 중도장애인도 재취업, 경제성, 이동성, 사회관계상의 문제 및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정신건강 문제 등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수경, 김동기, 2006). 또한 장애노인 중 전체대상자의 74.4%가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김용섭, 2009). 이종운·허만세(2012)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노인의 사회적·정서적 고립감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활동제한, 사회적 역할 제한뿐만 아니라 만성적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 정신건강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 취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직업은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의존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취업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 취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은 동기, 자기 확신, 대인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실질적인 성취경험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재순,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장기실업상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처해 있다(백동훈, 2010; 조민수, 2009). 다수의 연구들(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2013; 이석원, 정술, 2016; 정병오, 2010; 조민수, 2009; 한애경, 윤혜미, 2012)에서는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곧 고령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고령장애인들의 장애와 함께 노화라는 이중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면서 부정적인 정신건강은

심화되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고민석, 김동주, 2014; 김한성, 이유신, 2014; 심경순, 2013)들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실업은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불안, 긴장,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으며(장재윤 외, 2004), 대졸자들은 취업한 이후 우울과 불안 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재가장애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최미영 외, 2015). 즉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자아존중감(고민석, 김동주, 2014), 노후에 대한 준비(박주영, 2013) 같은 요인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직업활동이라는 사회참여활동을 통해서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 고령장애인이 일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고양하고, 우울·불안 등 정신병적 증상을 감소시키며,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사회에 통합되어 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선순환적 유발효과도 생길 수 있다.

### 3. 차별과 정신건강의 관계

차별(discrimination)은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그 차이로 인해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정치·경제·여가·문화활동 등 사회참여는 제한적이다(박현숙, 2014;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희 외, 2015).

차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이 차별로 인해 우울이나 고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전상남, 신학진, 2011), 차별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nson and, Hanline, 1990). 또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장애인,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들(고민석, 김동주, 2013; 고민석, 김동주, 2014; 박현숙, 2014; 이지수, 2011; 전지혜, 2010)에서도 차별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차별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이 여전히 많다

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별이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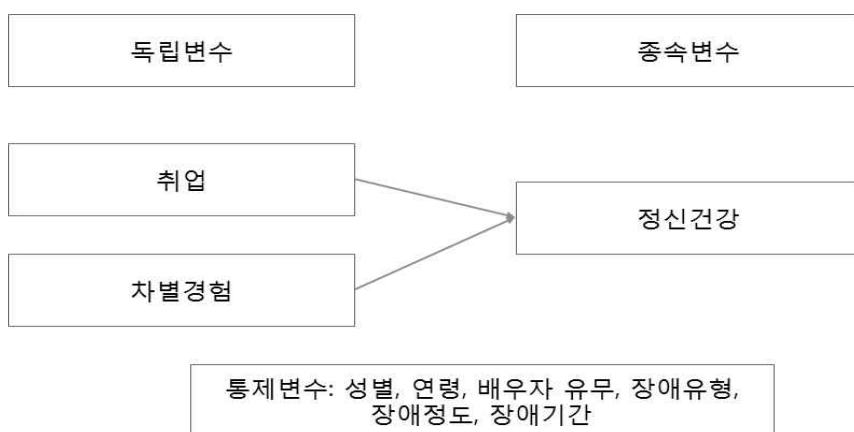
고령장애인들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박현숙, 양희택, 2013; 송진영, 2013)는 연구결과는 차별적 인식이 고령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16년 1월에 이뤄졌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일종인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J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단체, 기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5세 이상 고령장애인 중에서 설문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장애 당사자 167명에게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전국 및 J시의 장애인관련 특성 파악에 기초하여 1차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이를 장애인복지전공 교수에게 자문 및 J시의 장애인관련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J장애인복지관의 협조로 고령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설문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에 기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은 조사원이 읽어주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3. 변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이다. 정신건강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잘 견디어 내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며, 욕구부족과 갈등,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잘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여 현실문제 해결능력이 높고, 사회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김승경, 2010; 김유경, 2010). 특히 정신건강은 긍정적 정신건강과 부정적 정신건강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Bryant & Veroff, 1983; Kazdin, 1993; Veit & Ware, 1983; 오찬교, 201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부정적 정신건강으로만 한정지어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활용된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십니까?’, ‘최근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귀하는 평상 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의 3개 문항에 대해 거의 없다(1)~매우 많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3개 문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을 측정한 3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bach's  $\alpha = .706$ 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독립변수로는 취업과 차별경험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고령장애인의 취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에 대해 유급노동과 무급 가족노동을 취업하고 있음(1),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취업하지 않음(0)으로 재처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고령장애인의 차별경험은 ‘현재 귀하의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항상 느낀다’와 ‘가끔 느낀다’는 차별을 경험함(1)으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음(0)으로 재코딩하였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는 있다(1), 없다(0)로 측정하였다. 즉 재코딩된 차별과 폭력 경험을 더미변수로 각각 재부호화한 값을 총합으로 차별경험으로 재부호화하여 차별과 폭력 경험 모두 없음(0)부터 차별과 폭력경험 모두 있음(2)까지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성별은 여성(0)과 남성(1)으로 더미화 했으며, 연령은 연속변수,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0)과 있음(1), 장애유형은 신체적장애(0)와 기타장애(1), 장애정도는 중증(0)과 경증(1), 장애기간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일차적으로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독립변수(취업 유무와 차별정도)와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에 대해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통제변수와 각 독립변수들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는 t-test를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 Ⅳ.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성이 92명(55.1%), 여성이 75명(44.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80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1명(30.5%), 50세 미만이 36명(21.6%)으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60.0세(sd=0.67)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자가 118명(70.7%)으로 매우 높았으며, 배우자 없음은 49명(29.3%)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가 101명(60.5%)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각장애는 50명(29.9%), 내부기관 장애는 13명(7.8%), 발달장애는 3명(1.8%)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 중증 장애가 102명(62.2%)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증 장애는 62명(37.8%)으로 나타났다. 장애기간은 30년 이상이 79명(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미만도 30명(19.0%)으로 나타났고, 10년~20년 미만이 27명(17.1%), 20년~30년 미만이 22명(13.9%)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장애기간은 31.1년(sd=.67)으로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합계(%)	M(SD)
성별	남성	92	55.1	167(100.0)	60.0(10.67)
	여성	75	44.9		
연령	50세 미만	36	21.6	167(100.0)	
	50대	51	30.5		
	60세 이상	80	47.9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18	70.7	167(100.0)	
	배우자 없음	49	29.3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101	60.5	167(100.0)	
	감각장애	50	29.9		
	발달장애	3	1.8		
	내부기관장애	13	7.8		
장애정도	중증	102	62.2	164(100.0)	
	경증	62	37.8		
장애기간	10년 미만	30	19.0	158(100.0)	31.1(.67)
	10년~20년 미만	27	17.1		
	20년~30년 미만	22	13.9		
	30년 이상	79	50.0		

그리고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응답자들의 취업유무를 살펴보면, 직업 없음은 107명(64.1%)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 있음은 60명(35.9%)으로 나타났다. <표 3>의 차별경험을 살펴보면, 평균 0.8(sd=.67)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의 정신건강은 평균 2.1(sd=.72)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1

구분		N	%	합계(%)	M(SD)
취업유무	직업 없음	107	64.1	167(100.0)	
	직업 있음	60	35.9		

〈표 3〉 주요변수의 특성-2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M	SD
차별경험	163	.00	2.00	0.8	.67
정신건강	165	1.00	4.00	2.1	.72

## 2. 주요변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설명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취업유무와 차별경험이 집단에 따라 정신건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유무에서는 무직인 고령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은 평균 2.2점(sd=.82)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고령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은 평균 1.9점(sd=.48)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667$ ,  $p<.01$ ). 그리고 차별경험이 있는 고령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은 평균 1.8점(sd=.75)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차별경험이 없는 고령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은 평균 2.2점(sd=.69)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769$ ,  $p<.01$ ).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을수록,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p)
취업유무	직업 없음	105	2.2	.82	2.667**
	직업 있음	60	1.9	.48	
차별경험	있음	51	1.8	.75	-2.769**
	없음	112	2.2	.69	

\*  $p<.05$  \*\*  $p<.01$  \*\*\*  $p<.001$ 

### 3. 주요 변수들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난 변수는 장애유형( $r=-.224$ ,  $p<.01$ ), 취업유무( $r=-.180$ ,  $p<.05$ )와 차별경험( $r=.213$ ,  $p<.1$ )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연령과 장애정도가  $r=.422$ 로 나타났으나,  $r<.7$  미만으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장애유형, 취업유무, 차별경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수들 간 관계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규명하였다.

〈표 5〉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장애기간	장애정도	장애유형	취업유무	차별경험
배우자 유무	.026							
연령	-.173*	.116						
장애기간	.190*	-.126	-.409***					
장애정도	-.228**	.059	.422***	-.419***				
장애유형	.065	.144	-.067	.254**	-.332***			
취업유무	.149	.099	-.325***	.268**	-.191*	.212***		
차별경험	.119	-.030	-.237**	.285***	-.274***	-.008	.178*	
정신건강	-.045	-.106	-.019	-.051	-.105	-.224**	-.180*	.213**

\*  $p<.05$  \*\*  $p<.01$  \*\*\*  $p<.001$

#### 4.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통제변수만을 입력한 제1모형과 독립변수인 취업과 차별경험을 입력한 제2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만을 입력한 제1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928$ ,  $p<.05$ ), 종속변수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설명력은 7.0%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장애인 중 비신체적 장애가 정신건강에 부적영향을 주고 있으며( $\beta=-.292$ ,  $p<.01$ ), 고령장애인의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정신건강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8$ ,  $p<.01$ ). 즉 비신체적 장애와 경증의 장애인 일수록 부정적 정신건강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설명변수를 입력한 제2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F=3.673$ ,  $p<.01$ ), 제2모형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크기는 차별경험( $\beta=.221$ ,  $p<.05$ ), 장애유형( $\beta=-.213$ ,  $p<.05$ ), 장애정도( $\beta=-.210$ ,  $p<.05$ ), 취업유무( $\beta=-.186$ ,  $p<.05$ )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장애유형·장애정도·취업유무는 부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 비신체적 장애인과 경증의 장애인일수록 정신건강이 더 좋고, 취업한 고령장애인의 경우일수록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신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1모형		2모형	
	B	$\beta$	B	$\beta$
(상수)	2.591		2.488	
성별 (0=여)	-.110	-.074	-.087	-.058
연령	.001	.007	-.001	-.012
배우자 유무 (0=배우자 없음)	-.057	-.035	-.033	-.020
장애유형 (0=신체적장애)	-.443	-.292**	-.322	-.213*
장애정도 (0=중증)	-.411	-.268**	-.321	-.210*
장애기간	-.002	-.066	-.003	-.088
취업유무(0=직업 없음)			-.288	-.186*
차별경험			.242	.221*
F(p)	2.928*		3.673**	
수정된 $r^2$	.070		.123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제언

고령장애인의 취업과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른 선행연구들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장애인들이 취업한 경험이 있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들의 실업이 부정적 정신건강을 높이고, 취업이 우울 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며(장재윤 등, 2006),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김한성·이유신, 2014; 고민석, 김동주, 2014; 심경순, 2013)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고령장애인들의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이나 고독을 더 심화시킨다는 결과(전상남, 신학진, 2011), 중증장애인이거나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고민석·김동주, 2013, 2014),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이지수, 2011; 박현숙, 2014),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우울(전지혜, 2010)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고령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취업할 기회를 높이고, 차별경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일 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동일연령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예산을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계약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기관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 등)이 고령장애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장년장애인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의무고용기회를 개선하여, 고령장애인에게 공평한 의무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낮출 수 있는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고령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과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지도점검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낮출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27개 손해배상 청구 중 13건만 인용되었으며 3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뤄졌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 기소되어 유죄판단과 양형에 적용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애인 차별 개선과 차별 피해장애인에 대한 구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7). 따라서 피해자 소송지원과 집단구제제도의 도입, 차별의 악성성 충족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J지역의 고령장애인으로 한정된 전국 규모의 표본이 아니고 확률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연령층,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고령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강승원, 이해경 (2016). 고령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40(2): 31-56.
- 고민석, 김동주 (2013). 중증장애근로자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과 일상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8(2): 105-114.
- 고민석, 김동주 (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2): 137-164.
- 권오균 (2008).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7-32.
- 김미옥, 최정민, 강승원 (2013). 중년기 뇌졸중 장애인의 삶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1): 33-58.
- 김성원 (2015).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진 (2012). 농산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직업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이송희, 노승현, 정일교 (2011).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봉, 고재욱 (2011). 장애인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분석: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5: 171-186.
- 김승경 (2010). 노인의 수중운동참여가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탁 (2007). 고령장애인 고용 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유경 (2010). 태권도 지도자들의 직무수행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2015). 지체장애인의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1): 27-54.
- 김은주 (2012). 고령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욕구. 제4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321-338.

- 김종대 (1994). 정부의 주요 복지증진 시책. *국책연구*, 38: 168-179.
- 김종일 (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84.
- 김찬우 (2015). 고령장애인의 개념 정립과 복지욕구 비교를 통한 돌봄 서비스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고찰. *비판사회정책*, 46: 165-201.
- 김한성, 이유신 (2014).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 유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4): 146-171.
- 김형수, 김용섭 (2009). 장애인노인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2: 183-215.
- 노승현 (2012).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중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51-82.
- 박병순 (2010). 장애유형에 따른 스포츠 참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 김동기 (2006). 산재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1(3): 150-174.
- 박주영 (2013). 고령 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노후준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7(4): 53-77.
- 박현숙 (2014).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차세대인문사회연구*, 10: 105-123.
- 박현숙, 박용순 (2015). 재가장애인노인의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장애수용과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9: 51-73.
-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인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 박혜원, 김호진, 방종관, 임예직, 유완식, 김언아 (2017).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백동훈 (2010).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성장애인 취업자 및 구직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 (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진영 (2013).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리, 김정미, 유동철, 김동기 (2016).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비판사회정책, 50: 200-240.
- 심경순 (2013). 정신장애인의 취업 및 직무수행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45: 113-135.
- 양희택, 김민수, 박익샘 (2013). 경기도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연구, 경기복지재단.
- 양희택, 신원우 (2011).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에 따른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255-278.
- 오찬교 (2015). 중도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원, 정술 (2016).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6(1): 41-66.
- 이은실 (2018).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건강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순 (2010). 고용이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운, 허만세 (2012). 청각장애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가족기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4): 133-158.
- 이중섭 (2009). 빈곤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0): 79-105.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이채식, 김명식 (2014). 중고령 장애인의 취업장과 미취업자간의 제반 특성비교를 통한 취업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24(3): 5-34.
-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3(2): 121-144.
-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5(1): 65-87.
- 전상남, 신학진 (2011). 노인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고독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1(4): 925-938.
- 전용수 (2007).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청각장애 여성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1-80.

- 정병오 (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20(2): 143-174.
- 정승원 (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 조광호 (2003).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민수 (2009).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 토론회 자료집.
- 최미영, 이승은, 박현식 (2015). 사회적 배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취업활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9: 9-29.
- 최영희 (1999). 기독교 신자인 지체부자유학생들의 자아개념 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정, 박경수, 이석호 (2014).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4(3): 123-146.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 한애경, 윤혜미 (2012).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2(3): 153-181.
- Hanson, M. J., and M. Hanline. (1990).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3), 234-248
- Hilton, B. A. (1992). Perceptions of Uncertainty: It`s relevance to life-threatening and chronic illness. Critical Care Nurse 12(2), 70-73.
- Ruth, D. (1994). Powerlessness of caregivers in home ca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3, 155-158.

## Effects of Employment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Mental Health

Kang Seung Won

Jeollanamdo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mental health. Based on the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welfare implications for the disabl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ed 167 people aged 45 or older in the local area and who were severely disabled in the J central area in January 2016.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xperienced less of a negative mental health as they participated in employment, and the higher thei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the higher their negative mental healt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ovision of welfare benefits for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extend the number of welfare jobs for the disabled who can participate i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policies for the entry of the disabled into the general labour market should be improved. Thir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Fourt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Relief of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Act) needs to be amended to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 **key words** :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Mental health, Employment, Discrimination experience

논문투고일 : 2018. 04. 30.

논문심사일 : 2018. 06. 21.

게재확정일 : 2018. 06. 30.

## 원고투고요령

### 1. 원고투고요령

「장애인복지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관련 주제에 대해 25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논문 투고 시 원고 및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이 때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2. 발간 횟수 및 발간일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횟수는 연2회로 하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원고 투고 시기

장애인복지연구의 원고는 상시 투고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시간과 발간일을 고려하여 6월 30일 발행본은 4월 30일, 12월 31일 발행본은 10월31일에 원고 접수를 마감한다. 제출된 논문은 「장애인복지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제출처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 담당자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E-mail: jggmskh@koddi.or.kr

## 「장애인복지연구」논문투고 및 심사규칙

제 정 2017. 02. 06.

### 제1장 논문투고

**제1조(투고자격)** 「장애인복지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관지로서 투고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조(투고내용)** ① 원고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임상, 장애학, 장애문제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한다.

② 게재할 논문은 어떠한 표절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중복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게재 가능하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발간일정)** ① 발간일정은 연2회 정기적(6월 30일 , 12월 31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접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기간과 발행일을 고려한 접수 마감일은 아래와 같다.

1. 6월 30일 발행본 : 4월 30일

2. 12월 31일 발행본 : 10월 31일

③ 심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고 한다.

**제4조(논문제출)** ①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 <서식 1>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②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를 통해 공지한다.



③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④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투고된 논문의 성격이 본 지와 맞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제5조(저작권)** 본 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본 지가 소유하게 되며, 본 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6조(작성 요령)** ① 논문의 매수는 A4용지 16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학술지 페이지 제한은 25쪽 이내 이며, 1쪽 추가 시 1만원씩 추가 부담한다.

② 원고작성 요령 [별지1]의 논문작성 요령과 같으며, [별지1] 이외의 원고작성 요령은 APA양식에 준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장애인복지연구』 지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정책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제3장 논문심사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편집위원)**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편

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②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연구자 무기명 상태로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된 원고 사본을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기본 심사양식인 논문심사평가서 <서식 2>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③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④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⑤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2] 심사판정표에 따라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⑥ 5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 <서식 3>과 함께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 <서식 3>과 함께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 제12조(편집 확정)**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을 의뢰하며, 출판 의뢰 이후에는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오류 및 오타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정확히 명시한다.
- ④ 동일인(주저자·교신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 ⑥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제13조(이의신청 및 재투고)** ①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최종판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 칙 〈2017 · 2 · 6〉

-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연구」 논문작성법

### 1. 논문의 순서

모든 논문은 아래 제시된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초록을 앞으로, 국문초록을 뒤로 배치하되 국문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 ① 논문제목
- ② 저자성명(소속 및 지위)
- ③ 국문초록(600자 이내) 및 주제어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영문초록(250단어 이내,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주제어 순)
- ⑦ 부록(필요한 경우)

### 2. 분량 및 용지설정

- 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한글 2002 이상)로 작성하며, 논문의 분량(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포함)은 25쪽 이하로 작성한다.
- ② 용지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용지종류	A4(210×297mm)	
용지여백	위쪽: 38mm    아래쪽: 38mm 왼쪽: 35mm    오른쪽: 35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제본: 0mm
글자모양	글꼴: 휴먼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0%
문단모양	정렬방식: 혼합 문단여백: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2(space bar)	줄간격: 160% 문단 위: 0pt, 문단 아래: 0pt 최소공백: 100%

### 3. 저자 성명

- ①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소속과 지위는 각주 처리하여 표기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4. 국문초록

- ①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600자 또는 A4 1/2 분량으로 한다.
- ②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 (휴먼명조 10pt, 네모 틀 안)

주제어 : 수요자 중심주의, 직업재활서비스, 연계(휴먼명조 9pt, 진하게, 주제어 3개 이상)

#### 5. 영문초록

- ① 영문초록은 250단어 또는 A4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② 영문초록은 논문제목, 성명(직위, 소속), 요약, Key words 순으로 작성한다.

#### 6. 본문

- ①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 항목순서 : I. → 1. → 1) → (1) → ① → 가.
- 항목설정

### I. 휴먼명조 16pt, 진하게

#### 1. 휴먼명조 14pt, 진하게

##### 1) 휴먼명조 12pt, 진하게

##### (1) 휴먼명조 11pt, 진하게

##### ① 휴먼명조 11pt

##### 가. 휴먼명조 11pt

- ④ 표와 그림은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표 그림	글꼴: 휴먼명조 크기: 9pt 줄간격: 130% 선모양: 위, 아래(0.4mm)	표(그림) 제목 글꼴: 휴먼명조 표(그림) 제목 크기: 10pt
		표 단위 글꼴: 휴먼명조 표 단위 크기: 9pt 표 단위 정렬: 표 위 오른쪽 (예) (단위 : %, 명)

## 7. 문헌의 인용

① 본문 내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 간행물 혹은 편집된 저서에 실린 단일 문헌의 경우의 표기

- 본문에서 저자와 연도만을 표기한다(예 1).
- 저서의 경우에는 저자, 연도에 이어 쪽수를 표기한다(예 2).

예1) ...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이희성, 장성만, 1992).

예2) ... 주장이 제기되었다(김경애, 2000, pp. 77-80).

### ☐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의 표기

- 국내 문헌의 경우 자료 출처에 있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그대로 본문 내에 기입한다. 국내 저자의 경우 저자의 이름이 논문 중에 나오면 저자의 성명을 쓰고 출판 연도는 성명 옆에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이남순(2006)은 아동들의 관심이 수업에 반영되었을 때, ...

예) Hoffman(1980)은 남성보다 여성이 도덕적 원리를...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할 내용의 문장을 끝낸 후 마침표를 찍기 전에 괄호 안에 완전한 저자명(단,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저자의 성만)과 연도(,) 그리고 출판 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이남순, 2006).

예) 민감성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amon, 1986).

### ☐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의 표기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서 인용했을 때는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그 연구가 인용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예 1).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에 괄호로 묶어 처리했을 때는 한국 문헌과 동양 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 문헌의 경우는 ‘&’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수 연구물은 세미 콜론(:)으로 서로 다른 연구임을 표기한다(예 2).

예1) 강영숙과 고운주(1992)는... / Dobson과 White(2006)는...

예2) ...라고 주장하였다(강영숙, 고운주, 1992; Dobson & White, 2006)

-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처음 인용할 때에만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며(예 1), 두 번째 인용할 때부터는 첫 저자명만 쓴다(예 2).

예1) 김상희, 박성연, 이옥경(2006)의 연구에서는... / ..을 분석한 연구(김상희, 박성연, 이옥경, 2006)에서는...

Liben, Mandler, Nelson, 와 Norder(1997)등은... / 연구자들(Liben, Mandler, Nelson, & Norder, 1997)은...

예2) 김상희 등(2006)의 연구 결과... / Colman 등(1997)은...

-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첫 저자명만 쓰는데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 라고 쓴 후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 □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없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에는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예) 최근 연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6)에 의하면... / 외국의 연구(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7) 결과는...

#### □ 재인용

- 재인용은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예1).
- 저자명이 본문 중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 출처의 저자명과 이 자료의 출판 연도를 적고 출판 연도에 이어 “에서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예2).
- 괄호 안에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가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는 쉼표로 구분하고 원전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하고 재인용 연구의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적고 “에서 재인용”이라고 적는다(예3). 이를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할 때는 재인용 문헌만을 표기하면 된다.

예1) 이희성(1990: 권양희, 1998에서 재인용)은...

예2) ...을 제시하였다(Hoffman, 1979: 김경혜, 1991에서 재인용).

예3)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aharish, 1951: Gordon, 1989에서 재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 동일인에 의한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때는 출판 연도 순으로(인쇄중인 것은 맨 끝에)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하여 제시한다(예 3). 그리고 참고문헌 목록도 같은 요령으로 수록한다.

예1) 선행 연구들(나영대, 김승기, 1992, 1999, 인쇄중)에서...

예2) 선행 연구들(Hill & Cochran, 1996, 1997, in press)에서...

예3) 최근 연구(천명기, 1999a, 1999b)에서는...

- 한 괄호 안에 여러 저자들의 연구가 두 개 이상 표기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연구들을 구분한다.

예) 여러 연구(장근영, 1998a, 1998b; 홍성기, 1999; Allen, 1981)에서는...

□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될 경우

- 국내 문헌, 동양 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서), 서양 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예) 여러 연구들(장시철, 2000; 한가람, 1994; Elkind, 1991; Mussen, 1995) 등에서...c

## 8. 참고문헌

### ① 참고문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일반적인 원칙

-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 책명은 국문의 경우에는 고딕체(Gothic)로,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Italic)체로 한다. 단, 고딕체나 이탤릭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밑줄로 대신한다.
-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1 칸씩 띄운다.
-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저자, 출판 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출판 지역은 잘 알려진 도시는 도시명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도시명과 주(또는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다.



#### □ 단행본의 경우

-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김성태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예) Atkinson, J. W.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

예) 한범숙, 윤미란, 이경민 (199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예)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예) Coltheart, M., Curtis, B., & Lyon, S. (1996). *Obesity* (2nd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Inc.

- 편집한 서적인 경우

예) 이정환, 남주성(편)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예)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예) 이정환, 남주성 (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예) Levine, D. U., & Havighurst, R. J.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번역서인 경우

예) Crane, W. C. (1983).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63년에 출판).

예) Sartre, J. P. (1958). *Being and nothingness*. (H. E. Barnes, Tran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예) 백석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천안: 백석대학교.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았을 경우, 학술발표 연월일과 장소를 기입하고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이견우 (2000).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갈등: 세기말의 힙합문화를 중심으로. 심포지움 대중 문화의 시대 발표 논문. 3월 8일. 서울: 세종 문화회관. 미간행.

#### □ 정기간행물인 경우

- 정기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 경우

: 학술지 및 권(volume)에만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한다.

: 쪽의 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쪽을 나타내는 기호인 pp. 를 쓰지 않는다.

예) 황윤한 (1995).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 연구**, 33(1), 237-252.

Lapp, D., & Flood, J. (1994). Integrating the curriculum: First steps. *The Reading Teacher*, 47, 416-419.

- 비학술지(잡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인 경우: 기고자(寄稿者)가 나타나 있는 경우는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예) 김미연(2000. 12). 남해 기행. **새 벗**, 43-45.

예)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 주간지, 일간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 기사(記事)인 경우  
: 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춤추는 대학입시. (1996. 3. 6.). **한국교육신문**, p. 2.

: 기고자가 밝혀진 경우

예) 김철수. (2002. 8. 12).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유린. **동아일보**, 6.

예)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공선옥 (1997, 가을).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82-137.

#### ☐ 학위논문의 경우

예) 이진희 (1997).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천안대학교 대학원, 천안.

예) Wiebe, M. J. (1994). *Implications of autistic symptomatology for congenital rubella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 ☐ 초록 문헌의 경우

예) 한덕웅, 이경성 (1999). 대학생의 신체 질병을 예언하는데 관련된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pp. 190-193. 8월 19일. 서울: 연세 대학교 제 2 인문관.

예) Woolf, N. J., Young, S.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Society for Neuroscience*, 17, 480. [Abstracts]

#### ☐ 재인용 자료들의 제시

예) [본문에서는] 김혜숙(1990; 김혜숙,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인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 9. 논문저자 및 심사정보 표시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시 초록 하단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교신저자는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영문초록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심사일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그대로 게재’ 논문은 최종심사결과가 나온 날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까지
  -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 〈편집위원장〉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 〈편집위원〉

김경미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미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원 (우석대 재활학과 교수)

신현욱 (전주대 재활학과 교수)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준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 〈기획·편집〉

송기호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9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

발 행 일 : 2018년 6월 30일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 02-3433-0600

팩 스 : 02-416-9567

홈페이지 : [www.koddi.or.kr](http://www.koddi.or.kr)

인 쇄 처 :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